

# 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소위원회

## 결 정

사 건 명 15-직권-00002 학생 인격권 등 인권침해  
피 해 자 ○○○(○○○○초등학교 ○학년 재학 중)  
피 조 사 자 ○○○(○○○○초등학교 교사)

## 주 문

### 1. 전라북도교육감에게,

가. 피조사자가 피해자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과 관련하여, 피조사자에 대한 신분상 처분으로 “경고”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나. ○○○○초등학교 교장 ○○○이 관리자로서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과 관련하여, 위 ○○○에 대한 신분상 처분으로 “주의” 조치 할 것을 권고한다.

다. 피조사자의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하게 된 것은, 교원들의 인권에 대한 이해 부족 및 낮은 인권감수성에서 기인하는 것이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 2. ○○○○초등학교장에게,

피조사자의 행위는 인권에 대한 이해 부족 및 낮은 인권감수성에서 기인한 것이므로, 학교 구성원들의 인권감수성 향상과 학생인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위해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인권 향상을 위한 실천 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다.

# 이 유

## I. 직권조사 개요

### 1. 직권조사 실시 배경과 목적

2014. 7. 21. 경 ○○○○초등학교 ○학년 ○반 교실에서, 담임교사인 피조사자가, 피해자가 욕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신고 있던 양말을 입에 물게 하고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으며, 학교누리집(홈페이지) 학급게시판에 위 사진을 게시하여 2015. 4. 7. 현재까지 위 사진이 게시되어 있다는 내용의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되었다.

위 사안은 이에 대한 구제신청은 없었으나, 학생이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교사가 학생이 신고 있던 양말을 벗겨 입에 물게 한 후,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그 사진을 학교누리집 학급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학생의 인격권,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사생활의 자유 등

을 침해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는 중대하고 심각한 학생인권침해 사안에 해당하고, 민원인의 신분을 보호할 필요가 강하게 인정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직권조사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여, 전라북도 학생인권교육센터(이하 “학생인권교육센터”라 한다)는 위 사안을 직권조사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위와 같은 사진을 찍어 게시판에 공개적으로 게시한 것이 사실일 경우,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도 고려하였다.

## 2. 직권조사의 방법

학생인권교육센터는 2015. 4. 7.(화) 위 사안에 대한 직권조사를 결정하고, 같은 날 피조사자에 대한 면담 및 해당 학교누리집 학급게시판의 관련 사진을 확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 II.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판단

## 1. 관련규정

별지 기재 목록과 같다.

##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 가. 피조사자의 주장

(1) 2014. 7. 경 ○○○○초등학교 ○학년 ○반 교실에서, 피해자가 신고 있던 양말을 벗어 입에 물게 하고,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다.

위 사진을 학교누리집 학급게시판에 게시한 날은 2014. 7. 21.경이었는데, 학생들의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바로 게시하는 것은 아니어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2) 피해자에게 양말을 입에 물게 하고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게 된 상황은 다음과 같다.

(가) 학기 초에 학급에서 학생들과 학급규칙을 정하고 규칙대로 생활해보는 시간을 1주일 정도 가지는데, 2014년 1학기 초에 학생들의 언어생활에 대한 학급규칙을 정했다. 그 때 학생들이 정한 규칙 중의 하나가 ‘욕설을 하면 본인의 양말을 입에 물고 서있기’였다.

(나) 피조사자는, 학생들이 욕설을 한 경우 자신의 양말을 입에 물고 서 있게 하는 것은 ‘체벌행위’가 될 소지가 높다고 생각하여, 위와 같은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학급게시판에 공개적으로 해당 사진을 올리는, 이른바 ‘욕쟁이 사진전’을 하자고 학생들에게 제안했다.

(3) 피조사자가 피해자의 위와 같은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그 사진을 게시한 행위는, 인권을 침해하거나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학생들이 회의를 하여 스스로 만든 규칙에 따라, 희망하는 학생들만 그 규칙을 적용하기로 학생들과 약속을 하였기 때문이다.

매년 학기 초에 학부모들에게, ‘아이들이 욕을 할 경우 아이들이 신고 있던 양말을 입에 물도록 할 것이다’는 내용과, 위 내용에 ‘학부모들이 동의할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고지하였는데, 모든 학부모가 위 내용에 동의하였다. 그래서 2012년, 2013년 ○○○○초등학교에 있을 때에도 위와 같

이 했고, 학생들이 욕을 할 경우 자신의 양말을 입에 물게 하고 사진을 찍어 학급게시판에 올리면, 학생들이 욕을 하지 않고 학생들의 생활교육을 할 때에도 효과가 있었다.

(4) 피해자의 위와 같은 모습을 찍고 그 사진을 학교누리집 학급게시판에 현재까지 게시하게 된 것은, 학교누리집 학급게시판에 사진을 올리면 자주 삭제하지 않고, 게시된 사진들이 학생들의 추억이고 학생들에게 필요한 사진일 수 있다고 생각하여 계속 유지하였던 것이다. 위 사진에 대하여, 피해자는 부끄러워하거나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또한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였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위 사진을 게시하였다.

#### 나. 피해자 측(피해자의 父 ○○)의 주장

피해자가 교실에서 욕설을 하여, 자신이 신고 있던 양말을 입에 문 상태에서 사진을 찍었고, 학급게시판에 그 사진이 게시된 것을 알고 있었다. 피해자는 집에 와서 ‘내가 잘못해서 그런거야’라고 웃으며 이야기 했고, 앞으로는 욕설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위 사진을 웃으며 찍었고, 자신은 이 상황에 대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고 괜찮다고 생각한다.

#### 다. 참고인(○○○○초등학교 교장 ○○○)의 주장

2014년 9월 위 학교로 발령을 받았다. 학교 누리집 학급게시판에 위와 같은 사진이 게시된 것을 알지 못하였는데, 만약 위와 같은 사진이 학교누리집 학급게시판에 게시된 것을 알았다면 즉각 조치를 취

했을 것이다.

위와 같은 피조사자의 행위는 학생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차후에는 이러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및 전달연수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

### 3. 인정사실

피조사자의 문답서, 피해자의 전화통화보고서, 참고인의 확인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조사자는 2014. 3.경, ‘욕설을 하는 학생은 자신이 신고 있던 양말을 입에 물고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학교누리집 학급게시판에 게시한다.’는 내용을 넣어 ○○○○초등학교 ○학년 ○반의 학급규칙을 만들었다.

나. 피조사자는 2014. 7. 경,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신고 있던 양말을 피해자의 입에 물게 하고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다.

다. 피조사자는 2014. 7. 21.(월), 위 학교누리집 ○학년 ○반 학급게시판(공개 게시판)에 위 사진을 게시하였고, 위 사진은 2015. 4. 7.(화)까지 약 8개월이 넘도록 게시되어 있었다(학생인권교육센터는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위 사진을 게시판에서 삭제하도록 학교 측에 권유하였고, 이를 받아들여 학교에서 해당 사진을 삭제하였다).

라. 피조사자는, 2012년과 2013년 ○○○○초등학교에 재직 시에도

‘욕설을 하는 학생은 양말을 입에 물리고 사진을 찍어 학교 누리집 학급게시판에 올린다’는 내용의 학급 규칙을 만들었다.

#### 4. 판단

##### 가.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및 인격권 침해 여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12조는 신체의 자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은 ‘학생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는 ‘학교의 장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법령 등에 따르면,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 존재로서,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며,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받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는, ‘학생에 대하여 징계할 때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학생을 지도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이하 ‘조례’라 함) 제9조는, ‘학생에게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고 있고, 「○○○○초등학교 학교생활규정」(이하 ‘생활규정’이라 함) 제35조

는, ‘학생들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정신적 모욕감과 수치심을 주는 언어폭력 등을 포함한 일체의 행위는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에 따르면,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에 대한 생활교육을 할 때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통상적으로 자신이 신고 있는 양말을 벗어서 입에 물도록 하는 것은 정신적 모욕감과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이 명백하고, 정신적·정서적 학대라고 할 수 있으므로 중대한 인권침해로 보인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피조사자의 행위는 피해자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와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 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침해에 대하여

조례 제14조는, ‘학생은 가족, 교우관계, 성적, 징계기록 등 사적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지며, 누구든지 학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개인 정보를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함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생활규정 제26조는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에 따르면, 교사는 학생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학생의 사생활의 비밀을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피조사자가 2014. 7. 경, 학생생활교육의 목적으로, 피해자가 신고 있던 양말을 벗어 입에 물게 하고 이 모습을 사진으로 찍은 행위는,



피해자에게 불이익 또는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사적인 정보를 만들어 낸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초등학교 누리집 학급게시판에 공개적으로 게시하고, 2015. 4. 7.까지 약 8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위 사진을 게시한 행위는, 피해자에게 불이익 또는 수치심을 줄 수 있는 개인정보를 누설한 행위로서,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인권감수성과 관련하여

피조사자가 교사로서 근무한 것은 약 4년간이었는데요, ‘신규교원 연수 및 학교에서의 교직원 교육 시, 인권교육을 직접적으로 받은 적이 없다’고 답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을 때, 인권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였고, 결과적으로 인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피조사자는, “2014학년 학기 초에 학생들의 회의를 통하여, ‘욕설을 하는 학생은 양말을 입에 물리고 사진을 찍어 학교누리집 학급게시판에 올린다.’라는 내용의 학급규칙을 만들었고, 이후 해당 학급 규칙의 적용에 대해 학부모의 동의를 구하였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주장 역시 피조사자가 인권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고, 또한 이렇게 인권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황에서 피조사자에게 높은 인권감수성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은 피조사자의 개인적 직무수행능력의 문

제로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으나, 교원을 선발함에 있어 인권에 대한 이해 및 인권감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선발된 교원에 대해서도 인권에 대한 이해 및 인권감수성을 향상하기 위한 인권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피조사자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신분상 처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신규교사 및 교원들의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향후 위와 같은 인권침해행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적절한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이므로, 인권교육 실시 및 관련 대책 마련을 하도록 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 **라. ○○○○초등학교 교장의 의무 위반 여부**

참고인 ○○○은 위 학교 교장으로서 ‘교무를 통할(統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하여야 할 의무’를 갖고 있는바, 위와 같은 의무의 내용에는 위 학교의 게시판 관리할 의무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참고인은 피조사자의 위와 같은 행위를 인지하지 못하고, 피조사자가 위 학교누리집 학급게시판에 위와 같이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진을 장기간 게시하게 두었는바, 이는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였으며, 이는 위와 같은 의무 즉, 관리자로서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결과로 보이므로, 참고인에 대하여 신분상 처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Ⅲ.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49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5. 14.

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위원 전준형 (서명)

위원 오동선 (서명)

위원 임 송 (서명)

## [별지 : 관련규정]

### 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2조(신체의 자유, 자백의 증거능력)**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 나.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 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 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⑧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마.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3조(학생의 인권 보장원칙)** ①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의 인권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만 제한될 수 있으며,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제9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 학생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교육과정에서 체벌은 금지된다.

**제14조(사생활의 비밀을 보호 받을 권리)** ① 학생은 가족, 교우관계, 성적, 징계기록 등 사적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교외에서 이름표의 부착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에 관한 정보를 수집·처리·관리함에 있어서 적법하고 적절한 수단과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교육비, 급식비 미납사실 등 학생에 관한 사적 정보를 본

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학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개인 정보를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함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5조(인권옹호관의 직무)** ① 인권옹호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생인권침해에 관한 상담
2.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에 대한 조사와 직권조사
3.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적절한 시정과 조치 요구
4. 학생인권 관련 실태조사 및 정책 등의 연구·개발
5. 학생인권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
6.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내용에 대한 공포
7. 학생인권교육
8. 그 밖에 위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업무

**제49조(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과 조치)** ①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인권옹호관에게 그에 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구제신청을 받은 인권옹호관은 사건에 대하여 조사한 후 도 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와 교직원에게 대한 시정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권옹호관은 그 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1. 제삼자가 한 조사청구에 대해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조사나 상담이 청구될 당시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절차나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3. 조사청구가 익명 또는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4. 그 밖에 인권옹호관이 상담 및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인권옹호관이 제2항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교육감에게 통보하고, 그 요지를 공표하여야 한다.

⑤ 인권옹호관으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은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와 교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조치결과를 즉시 인권옹호관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인권옹호관의 권고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50조(조사)** ① 인권옹호관은 제46조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교육청, 교육지원청과 학교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교직원과 관계공무원에게 질의할 수 있다.

② 인권옹호관은 제49조제1항의 구제신청에 대한 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방문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교직원과 관계공무원은 제1항의 자료요구와 질의, 제2항의 현장방문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